

한국일보

'출산박람회 믿었는데'...산모 울린 도우미 사기

입력 2018.10.04 04:40 | 수정 2018.10.04 16:24 | 10면 0단

한국일보닷컴 개편 이벤트
개편 의견을 남기면
선물이 팡팡~!!



[저작권 한국일보]출산박람회사기-박구원기자 /2018-10-03(한국일보)

“아이 낳고 도우미만 기다렸는데, 오기로 한 날 연락두절이라 정말 패닉이었어요.”

지난달 출산한 김모(33)씨는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만 떠올리면 아직 아뜩하다. 지난 7월 열린 A 출산박람회(베이비페어)에 갔다가 산후도우미 업체인 B사에 산후도우미를 신청해 약 2주간 도와주는 비용으로 52만원을 미리 결제했지만 약속한 날 도우미가 오지 않은 것이다. 산후도우미는 수유와 산후 회복을 돕고 산모가 생활하는 공간에 한해 청소 등 집안일도 한다.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던 김씨는 “가뜩이나 출산 후 심신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런 걱정까지 떠안아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다.

베이비페어에서 예비산모가 산후도우미를 결제했다가 출산 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잦다. 더욱이 정부지원금 일종인 바우처(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권) 등록 업체도 아닌데 일감을 얻기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주최 측은 업체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아 갓 출산한 산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올 11월 출산을 앞둔 윤모(30)씨도 같은 베이비페어에서 ‘국가나 서울시의 출산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B업체 설명에 52만원을 현장에서 결제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정부사업 미등록 업체였다. 더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애초 정상적인 등록 절차도 아니었다. 윤씨는 “베이비페어 주최 측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업체에게 부스를 내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 업체에 대한 원성이 터져 나온다. 270만명 규모의 한 맘카페에는 ‘산후도우미가 오지 않은 데다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일에 오지 않아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는 등 불만을 터뜨리는 산모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업체에 부스를 내주고 비용을 걷고 사전·사후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주최 측의 무책임 탓이 크다. B 업체는 여러 베이비페어에서 버젓이 ‘소득 상관 없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해왔지만 주최 측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 A 베이비페어 관계자는 “200만원 상당의 부스 비용만 내고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참가할 수 있으며 따로 심사하는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일회성으로 열리는 박람회 특성상 사기성 짙은 업체가 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주최측이 소비자 보호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소비자가 베이비페어에 참여한 업체라는 점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최측이 참가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장치를 두도록 감독 기관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일시적으로 열리는 박람회에서 소비자들은 고액의 장기계약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